

김건희 특검법·檢 탄핵... 28일 국회 본회의 대치정국 분수령

국힘, 특검법 재의 요구·재의결 저지 당론...민주, 상설특검·국조 카드
우원식 의장, 안건 상정 시점 관심...AI기본법·단통법 폐지안 처리 전망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 등을 앞두고 연말 정국이 심상치 않게 전개되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 할 것으로 예측되는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의 재표결을 28일 본회의에서 추진할 방침이다. 김 여사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재표결을 거쳐 폐기됐고,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된 특검법도 동일한 패턴으로 지난달 4일 재표결에서 부결·폐기됐다. 재표결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여권의 이태표 8표 이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야의 집안 단속도 치열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의원총회에서 김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 건의와 재의결 저지를 당론으로 정하며 사실상 '단일대우'를 구축했고, 이태표 없이 특검법이 부결될 것으로 자신하는 분위기다. 오히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고리로 야당을 향한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릴 태세다.

민주당은 이번엔 특검법이 또 폐기되면 곧바로 네 번째 특검법을 다시 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야권은 김 여사 특검법과 별개로 검사 탄핵과 상설 특검, 국정조사 카드도 꺼내 들었다.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추가조사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김 여사를 서울중앙지검이 불기소 처분한 것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이장수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 2부장에 대한 탄핵안을 28일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의결해야 하는 만큼 29일 본회의도 열리는 입장이지만, 추가 본회의가 불발돼도 검사 탄핵안을 또 내겠다고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상설특검 후보 추천 때 여당을 배제하

는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 '채상병 순직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 계획서도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본회의의 개의를 권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위해 안건 상정 시점을 다음 달로 넘길 가능성이 있다.

여당은 검사 탄핵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 유죄 선고에 대한 보복성 '방탄 탄핵'으로 규정했다. 상설 특검 규칙 개정에도 대통령과 행정부를 옥죄는 '악법'이라고 비판하는 동시에 채상병 국정조사 역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아직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수용 불가'로 맞서고 있다.

이에 따라 민생법안이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여야 모두 이번 본회의에서 최대한 많은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입을 모으지만 얼마나 성과를 낼지는 미지수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가 가능한 법안으로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여야 합의 처리된 'AI(인공지능) 기본법 제정안'과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안' 정도가 꼽힌다.

민주당은 온라인플랫폼 거래 공정화법 제정도 추진 중이지만, 여당이 반대하는 만큼 일단 자영업자·소상공인 보호 방안을 담은 전자상거래법과 유통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또 양곡관리법(양곡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농업4법' 처리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양곡법은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은 양곡법 등 농업4법을 지난 21일 상임위에서 단독 처리한 바 있어 여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서도 "윤석열 퇴진" 광주지역 100여개 단체로 구성된 윤석열퇴진 시국대성회 추진위원회 1000여명이 지난 23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거리행진을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한동훈 '여권 쇄신' 드라이브 거나

특검법 재표결·개각 뒤 본격화 전망...민생·정책 홍보도 병행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여권의 '쇄신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25일 위중교사 사건 1심 선고로 최고조에 달하고, 한편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국회 재표결이 28일 이뤄지고 나면 여권이 국민에게 '달라진 모습'을 각인시킬 때라는 인식에서다.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 이후 윤 대통령 부부를 향한 추구성 발언을 자제해 온 한 대표는

최근 대통령실과 내각의 인적 개편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담화에서 대국민 사과를 하고 김 여사의 외부 활동 자제와 인적 쇄신을 약속했다고 판단, 당분간 여권의 안정을 도모하면서 윤 대통령의 약속 이행 여부를 지켜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읊조른대로 징계를 받고도 업무에 복귀해 논란을 일으켰던 강기훈 대통령실 선임행정관과 사표를 제출했다. 한 대표는 강 선임행정관과 강훈 전

대통령실 비서관 등을 김 여사의 '함남동리안'으로 지목한 바 있다. 강 선임행정관의 사표나 강 전 비서관의 한국관광공사 사장 지임 철회만으로는 한 대표가 강조한 인적 쇄신 눈높이에는 아직 못 미친다는 게 진한(진한동훈)계의 대체적인 기류다.

진한계는 개각에 대해서도 시기보다 내용이 중요하며 '회전문 인사'를 경계하고 있다. 인사에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는 대통령의 설명에는 공감하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각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대표는 이 같은 정치적 쇄신과 함께 민생 정책 홍보를 병행함으로써 이 대표 사법리스크에 따른 반사이익을 극대화하고, 김 여사 특검법 반대로 비롯되는 부정적 여론을 최소화 하겠다는 복안이다. /연합뉴스

광주시민단체협, 민주당에 정보공개법 개정안 폐지 촉구

"정보공개 자체 무력화 위험"

광주 시민단체가 더불어민주당에 정보공개법 개정안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24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5000만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는 개정은 정보 공개 제도 자체를 무력화할 수 있는 위험한 시도"라며 "민주당은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는 '공공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 의원은 지난 9월 정보공개 민원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해당 개정

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정보공개 담당자를 괴롭히기 위해 대량 또는 반복적인 청구로 판단되는 경우 정보공개심 의회를 거쳐 청구를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을 담았다.

양 의원에 따르면 매년 상위 10명이 청구한 건수가 118만 7670건(2021년 36만 510건, 2022년 57만 9594건, 2023년 24만 7566건)으로 전체의 23%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양 의원은 일부 지자체에서는 정보공개 청구인이 해당 서류를 수령조차 하지 않는 등 일부 악성 민원인으로 인해 정보공개 청구가 오용되는 사례가 발생 하기도 해 해당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개정 취지와 달리 시민단체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시민단체협의회는 "담당자를 괴롭힐 목적"이라는 표현은 공공기관이 정보공개 청구인의 목적과 의도를 주관적으로 판단하게 할 수 있다"며 "대량"이라는 불분명한 기준은 장기 정보나 여러 건의 내용을 분리해 청구했을 때 기관이 공개를 거부할 구실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양 의원은 해당 주장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개정안은 악성 정보공개 민원에 대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공무원도 최소한의 인권은 보장 받아야 하고 그 일환으로 최소한의 보장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법률안이다. 정당한 정보공개 청구 까지 막는다고 매도하는 것은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김혜나 기자 khn@

여의도 브리핑

민형배 "모든 5·18 관련자에 보상금 지급"

관련자 보상 법안 대표발의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았지만 규정이 미비해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이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광주 광산) 국회의원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6월부터 시작된 5·18 8차 보상금 지급 과정에서 수배·연행·구금·공소기각·유죄 판결·면소판결·해직·학사 징계자 등 관련자 일부가 보상금을 받지 못했다. 이들은 5·18 관련자로 인정받았지만 규정 미비로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누락된 5·18 관련자를 보상금



지급 규정에 명확히 적시하고 보상금 등 금액 결정에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도록 규정했다.

민 의원은 "5·18 관련자와 그 유족 모두에게 실질적 명예회복과 보상이 이뤄질길 기대한다"며 "5·18 진상규명과 정신 계승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진욱(광주 동남)·안도걸(광주 동남)·조인철(광주 서구)·양부남(광주 서구)·정준호(광주 북구)·전진숙(광주 북구)·박군택(광주 광산) 의원 등 광주지역 국회의원 전원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김혜나 기자 khn@kwangju.co.kr

"시를 꽃처럼 피워 주변을 시꽃으로 밝히고 싶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 받아도 시가 만나야 할 궁극적인 대상은 사람입니다.

조선의 시인 문예지 '시꽃피다' 창간



조선의 시인

농민신문신춘문예 당선, 기독교신문에 당선, '미션21' 신춘문예에 당선,

상상인 작품상, 송순문학상, 김만중문학상, 거제문학상, 신석정충분문학상 등 수상.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입의 문장』,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